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대비표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사)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의 치과기재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치과기재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p>제1장 총칙</p> <p>제1조 (목적)</p> <p>본 「치과기재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하 “본 규약”이라 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지양함으로써, 사업자간의 공정한 의료기기(치과용 의료기기에 한한다) 유통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국민 건강을 유지·개선시켜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1 조 (목적)</p> <p>이 세부운용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의 치과기재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 4조에 따라 규약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기본 원칙)</p> <p>사업자는 다음의 기본 원칙에 따라 본 규약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① 치과기재의 마케팅 활동은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및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p> <p>② 사업자는 보건의료인에게 제품에 대한 과학적·교육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환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이러한 노력이 보건의료인이 치과기재를 의료행위에 사용하도록 선정할 때 보장되는 결정의 독립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2항의 활동은 그 활동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p> <p>④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 '치과기재'라 함은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정의)에서 정한 의료기기 중 치과용 의료기기를 말한다.
- ② "사업자"라 함은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5조에 의거 의료기기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③ "판매업자등"이라 함은 「의료기기법」 제17조에 의거 의료기기의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한 후 의료기기의 판매업 또는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④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곳을 말한다.
- ⑤ "보건의료인"이라 함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하여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다만, 약사 및 한약사를 제외한다.
- ⑥ "견본품"이라 함은 의료기기의 소개용 완제품을 말한다.
- ⑦ "기부행위"라 함은 환영금품, 협찬금품, 찬조금품, 원조금품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의료기관, 학교, 학술연구 또는 산학협력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금품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⑧ "학술대회"라 함은 컨퍼런스, 심포지움, 세미나, 학술행사 등 명칭 여하나 진행 형식 등에 관계없이 보건의료인들에게 치의학 관련 과학적·교육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인들의 치의학 연구 또는 교육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를 말하되,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주최하는 행사는 제외한다. 이러한 학술대회 중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라 함은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인들이 참석(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아닌 청중으로 참가한 보건의료인들이 5개국 이상에서 내한하여야 한다)하며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규모의 학술대회로서,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회,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또는 사단법인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부터 국제학술대회로 인정받은 학술대회를 말한다. "국제학

회"라 함은 5개국 이상에서 외국인 정회원 수가 100명이상인 학회로서,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회,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또는 협회로부터 국제학회로 인정받은 학회를 말한다.

⑨ "제품설명회"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의료기관 소속 보건의료인에게 자사의 치과기재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와 개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의료기관 소속 보건의료인에게 자사의 치과기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⑩ "교육·훈련"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외에서 보건의료인, 시술 및 진단관련 종사자에게 시술 및 진단기술의 습득·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위로서, 의료기술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 또는 의료기술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훈련을 말한다.

⑪ "시장조사"라 함은 사업자가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요구를 포함하여 시장과 그 구성요소의 규모 및 특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한다.

⑫ "시판후조사"라 함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의료기기법」 제8조에 의한 재심사 대상 치과기재 등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검토, 확인 또는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용성적조사, 특별조사, 시판 후 임상시험 등 재심사 기간 중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⑬ "금품류"라 함은 방법의 여하를 막론하고 사업자가 의료기관등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하는 물품, 금전, 기타 경제상의 이익으로 다음 각 호의 1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 한다.

1. 물품 및 기계, 기구,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사용권을 포함한다)
2. 금전, 예금증서,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및 각종 명목의 지불이행각서
3. 향응(음식물, 영화·연극 등 각종 공연 및 스포츠·여행·골프·스키 등 각종 행사에 대한 초대 또는 우대를 포함한다)
4. 교통, 숙박, 학회등록 등의 편의
5. 근로 및 기타 서비스
6. 할인, 할증, 판매장려금 등(다만,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서 제공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에 해당하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점수"는 제외한다)

<p>제4조 (세부운용기준)</p> <p>① 협회는 본 규약의 취지를 반영해 규약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세부운용기준(이하 “운용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위해 필요할 경우 협회에 대하여 제1항의 운용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p>	
<p>제2장 금품류 제공의 허용범위</p> <p>제5조 (금품류 제공의 제한)</p> <p>① 사업자는 의료기관등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제3조 제13항에서 정한 금품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료기관등 또는 보건의료인의 금품류 제공 요구에 응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제6조 내지 제17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제공이 허용되는 금품류 외에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의료기기법」 제17조 제2항과 관련하여 동 법령의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음이 확인된 금품류를 예외적으로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p> <p>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의료기관등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금품류를 직접 제공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가 국내외 본사 또는 지사 또는 그 관계사, 판매업자등이나 마케팅 대행사(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치과기재의 판촉활동을 하는 회사)에게 금품류를 제공하면서 이를 의료기관등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2. 사업자가 판매업자등이나 마케팅 대행사가 의료기관등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하는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자가 판매업자등이나 마케팅 대행사에게 그 금품류를 제공하는 경우 	<p>제 2 조 (금품류 제공의 제한)</p> <p>① 규약 제5조 제1항에 정한 금품류 제공이 제한되는 “보건의료인”은, 규약 제3조 제4항에 의한 “보건의료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의료 관계법령에서 자격 또는 면허를 정한 보건의료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의료법: 치과의사, 간호사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다. 기타 법률: 간호조무사 라. 나목 내지 다목에 의한 보건의료인은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종사자인 경우에 한함 2.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 나. 의료기관 종사자(청소, 경비 등 보건의료서비스의 특성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성격의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자 제외)

<p>④ 보건의료인의 가족,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의료기관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회사 또는 단체에 대한 금품류의 제공은 이를 해당 보건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등에 대한 제공으로 본다.</p>	<p>② 규약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사업자의 국내외 본사, 지사나 그 관계사가 의료기관등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금품류를 제공한 경우”라 함은, 사업자가 사업자의 국내외 본사, 지사나 그 관계사에게 금품류를 제공하면서 이를 의료기관등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사업자의 국내외 본사, 지사나 그 관계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등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금품류를 제공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방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p> <p>③ 규약 제5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사업자가 판매업자등이나 마케팅 대행사가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금품류를 제공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판매업자등이나 마케팅 대행사에게 그 금품류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p>
<p>제6조 (견본품의 제공)</p> <p>① 사업자는 치과기재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포장 단위에 ‘견본품’ 또는 ‘sample’을 표시한 치과기재를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사업자는 해당 치과기재의 특성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수량 및 최소기간(반복 사용 가능한 치과기재로서, 그 사용횟수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사업자는 견본품을 시연용과 평가용으로 구분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p> <p>1. 해당 치과기재에 대하여 보건의료인 및 환자의 인지도 개선을 위한 시연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견본품을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의 포장 및 첨부 문서에 “인체사용금지” 또는 “환자에 대하여 사용이 금지된다”는 사항을 표기하여 제공하여야 한다.</p>	<p>제 3 조 (견본품)</p> <p>① 규약 제6조의 “최소포장단위”, “최소수량” 및 “최소기간”은 자사의 최소 포장단위, 최소수량단위 또는 최소기간을 기준으로 한다.</p> <p>② 사업자는 규약 제6조 제2항에 따른 시연용 제품은 보건의료인에, 평가용 제품은 의료기관(제공되는 해당 견본품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료과목별에 한함)에 대하여 최소포장단위로 1~2개 또는 평가에 필요한 최소 수량을 제공할 수 있다. 단, 평가용 제품 중 해당 제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변경허가 등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제공할 수 있다.</p> <p>③ 평가용 제품 중 수회의 반복적 사용이 가능한 제품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기준을 준수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절한 평가를 위하여 합리적으로</p>

<p>2. 보건의료인이 해당 제품의 적절한 사용 및 기능을 평가하고 장래 해당 제품의 사용, 주문, 구매 등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 및 첨부문서에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그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을 표기하고, 동 사항을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명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p>	<p>필요한 최소한의 기간(30일 이내) 동안만 제공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회 반복적인 사용이 가능한 제품의 평가 기간을 포함한 평가조건은 사전에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사업자는 보건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2. 평가기간 동안 평가용 제품의 소유권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이를 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평가기간이 종료하면 보건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거나 임차하지 않는 한,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항이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용제품의 제공기간을 연장(최초 제공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할 수 있으며 사업자 및 해당 보건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인된 평가기준 등을 준수함에 있어 30일로는 유효한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국내외 학회 기준 등 첨부) 2. 환자에게 사용함에 있어 평가기간을 30일로 제한할 경우 환자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치과의사 소견서 등 첨부)
<p>제7조 (기부행위)</p> <p>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근거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등에 치의학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있다.</p> <p>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부행위는 허용되지 아니 한다.</p>	<p>제4조 (기부행위)</p> <p>① 규약 제7조 제1항의 기부행위의 대상 의료기관등(규약 제7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은 규약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 중 규약 제9조 제1항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기관 또는 단체 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p>

<p>가. 기부하는 사업자의 치과기재에 대한 채택 등 거래와 관련한 이익이 약속되어 있는 경우</p> <p>나. 사업자가 치과기재에 대한 채택 등 거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등의 기부요청에 응하는 경우</p> <p>다. 사회통념상 의료기관등이 자신의 부담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비품구입, 시설 증·개축, 경영자금보전 등에 사용되는 자금에 충당되는 경우</p> <p>라. 정당한 이유없이 동일한 의료기관등에 반복적·지속적으로 기부금품을 제공하는 경우</p> <p>2. 사업자는 기부행위 전에 협회에서 정한 양식상에 기부목적, 기부규모 등을 기재하여 기부금품을 전달할 의료기관등(이하 “기부대상”이라 한다)의 선정을 협회에 의뢰하고, 이후 협회의 결정에 따라 기부 대상에 직접 기부한다.</p> <p>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의료기관등이 협회에 학술상 시상, 캠페인 등 사업(다만 사무국이 국내 소재의 국제학회의 경우 제1호 다목에도 불구하고 사무국 운영지원비를 포함한다)을 실시하기 위해 기부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라 직접 기부한다.</p> <p>가. 의료기관등이 협회에서 정한 양식상에 사업명, 사업개요, 기부요청금액 등을 기재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 소요예산안 등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기부 요청을 한다.</p> <p>나. 협회는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에 따라 공지를 통해 기부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모집하고 모집결과를 해당 기부대상 및 기부할 사업자에게 통지한다.</p> <p>다. 사업자는 협회의 통지에 따라 기부대상인 해당 의료기관등에 직접 기부한다.</p> <p>4. 사업자는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기부하는 것 이외에는 의료기관등이나 보건의료인에 대한 직접적인 기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p> <p>5. 사업자는 기부금품 전달이 완료된 후 기부행위의 일자·대상·목적·규모 등 기부관련 사실을 협회에서</p>	<p>키지 못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더라도 위원회가 인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치의학에 관한 연구발표 등 치의학 연구 목적으로 조직된 비영리 단체 일 것 2. 운영회칙이 제정되어 있을 것 3. 단체의 운영회비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을 것 4. 회비, 기타수입, 수입연구비용의 지출에 관한 재무, 회계의 규정을 갖고, 회원 개인 및 회원이 소속하는 각 의료기관등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회계규정을 갖고, 수입은 오로지 연구 활동을 위해서 사용되며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5. 총회, 이사회, 감사 등의 운영조직이 있을 것 6. 회장,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을 두고 있을 것 7.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치의학 연구활동을 하고 있을 것 8. 치의학 연구 활동을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간행물이 있을 것 9. 특정 의료기관에 종속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공익기금의 수혜자가 불특정다수 일 것 <p>②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협회에 규약 제7조 제1항 제2호의 기부대상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p>
---	---

<p>정한 양식에 따라 기부금품 전달일 기준 10일 이내에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6. 사업자는 기부금품의 회계처리 시 기부행위의 일자·대상·목적·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협회는 사업자를 대신해서 같은 항 제1호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기부대상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는 한편, 해당 사업자의 기부행위가 협회의 결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협회는 기부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사업자의 기부목적을 존중하며, 필요한 경우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업자를 참석시켜 관련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③ 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협회는 해당 의료기관등의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기부할 사업자를 정함에 있어 같은 항 제1호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기부행위가 협회의 통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자선적 목적으로 의료기관등에 치과기재를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협회에서 정한 양식상에 기부대상, 기부목적, 기부규모 등을 기재하여 협회에 사전 신고하고 기부대상에 직접 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사업자는 같은 항 제1호 가목 내지 라목, 제5호 및 제6호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협회는 사업자의 기부행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p>	<p>1. 사업자는 기부행위를 하기 전 최소 60일 이전에 기부대상의 선정을 첨부양식(별표1)에 따라 협회에 의뢰하여야 한다.</p> <p>2. 협회는 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협회 홈페이지에 최소 15일간 모집공고를 하여 기부대상을 선정하고, 사업자의 심의 의뢰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동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p> <p>3. 협회는 모집공고 시 의료기관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연구계획서)와 지출항목 및 비용이 적힌 예산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사업내용이 규약 제7조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사업자의 기부목적 등을 검토하여 기부대상을 선정한다.</p> <p>4. 기부대상을 통보받은 사업자가 협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기부대상 선정의뢰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p> <p>③ 협회가 규약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의료기관등의 기부요청을 승인한 경우, 협회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소 15일간 공고하여 첨부양식(별표2)에 따라 기부희망사업자를 모집하고, 각 기부희망사업자들의 기부희망금액에 따라 기부금액을 정하되, 기부희망사업자들의 기부희망금액의 합이 기부요청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자의 기부희망금액에 비례하여 기부금액을 안분한다.</p> <p>④ 사업자는 규약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기부신청 또는 기부금 모집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협회에_심의비 또는 수수료(이하 '심의비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p> <p>1. 기부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심의비등은 기부금액의 1.5%(100원이하 절삭)로 한다.</p>
--	---

2. 기부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심의비등은 1,500,000원으로 한다.
 3. 협회 회원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심의비등은 기부금액의 3%로 정률 적용한다.
 4. 사업자가 규약 제7조 제4항의 자선적 목적으로 의료기관등에 치과기재 등 금품류를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비등은 면제된다.
 5. 다음 각 목의 경우 협회는 심의비등을 반환하지 않는다.
 - 가. 심의완료 후 사업자가 기부대상 선정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 나. 심의결과 미승인 또는 부결되는 경우
 - 다. 규약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자가 기부금 모집에 참여하여 협회로부터 최종 기부액을 통보받은 후 철회하는 경우
 6. 협회는 사업자에게 심의비등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 ⑤ 규약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자는 기부금품 전달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첨부양식(별표4)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기부영수증 등의 기부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협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규약 제7조 제3항과 관련하여 협회는 의료기관등으로부터 해당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사업에 대한 총 수입 및 총 지출내역이 포함된 결산보고서와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사본을 제출받아 기부행위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첨부양식(별표4)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 ⑦ 규약 제7조 제4항의 경우, 사업자는 기부행위 전에 첨부양식(별표3)에 따라 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기부금품 전달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첨부양식(별표4)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기부 영수증 등의 기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관·단체가 주관하여 국내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의 개최 및 운영을 기부, 식음료 제공, 기념품 제공, 부스 임대, 광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회,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및 이들 협회 또는 단체가 승인·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

2. 협회가 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

② 사업자가 국내 학술대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제1항의 기관·단체가 협회에서 정한 양식상에 학술대회명, 학술대회개요, 지원요청금액 등을 기재하고 구체적인 학술대회계획서, 소요예산안 등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지원요청을 한다.

2. 협회는 학술대회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에 따라 공지를 통해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모집하고 모집결과를 해당 기관·단체 및 지원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3. 사업자는 협회의 통지에 따라 해당 학술대회를 지원한다.

4. 사업자는 해당 학술대회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학술대회 지원내역을 협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협회에 통보하며, 협회는 사업자가 학술대회 지원을 적정하게 하였는지 확인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협회는 학술대회 주관자가 해당 학술대회에 소요되는 총비용(다만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이상(2016년부터는 100분의 30이상)을 해당 학술대회 참가자로부터 받는 등록비(또는 참가비) 및 해당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기관·단체의 회원의 회비 등 자기부담으로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자의 해당 학술대회 지원을 인정해야 한다. 협회는 이러한 조건이 지켜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학술대회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학술

제5조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① 규약 제8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학술대회 주관자가 협회에 지원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학술대회 주관자는 학술대회 개최일 전 최소 60일 이전에 첨부양식(별표5)을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한다.

② 규약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학술대회 개최·운영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첨부양식(별표6)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본 기준 제4조 제4항에 따른 심의비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규약 제8조 제2항 제4호 및 제8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사업자는 학술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첨부양식(별표4)에 따라 지원내역을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규약 제8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학술대회 주관자가 각각 제출하여야 하는 소요예산 및 비용결산내역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학술대회 주관자는 결산내역 제출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총 수입은 학술대회와 관련한 등록비(또는 참가비), 단체 및 학회 자체예산, 부스비, 인쇄매체 및 인터넷 광고 판매비, 보건의료인 또는 의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기부금(지원금), 보건의료단체로부터의 기부금(지원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학술대회 개최·운영과 관련하여 들어온 수입의 총 합계를 말한다.

2. 총 지출은 학술대회와 관련한 식음료, 학술대회 주체가 초청한 발표자, 좌장, 토론자에 대한 초청비, 강연료, 대행사 수수료, 대관료, 단기고용 인력비, 인쇄·광고비 등 학술대회 개최·운영과 관련한 지출의 총 합계를 말한다.

<p>대회의 비용결산 내역을 협회에 통보할 것을 해당 학술대회 주관자에게 사업자의 해당 학술대회 지원 이전에 요청하며, 해당 학술대회 주관자가 이러한 협회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해당 학술대회 지원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협회는 위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거나 비용결산 내역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 향후 해당 학술대회 주관자가 개최하는 학술대회 지원을 거절할 수 있다.</p> <p>④ 사업자가 국내 개최 국제 학술대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p> <p>1. 사업자는 협회에서 정한 양식상에 학술대회명, 지원규모, 지원내역 등을 기재하여 협회에 사전 신고하고 해당 학술대회를 직접 지원할 수 있다.</p> <p>2. 사업자는 해당 학술대회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학술대회 지원내역을 협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협회에 통보하며, 협회는 사업자가 학술대회 지원을 적정하게 하였는지 확인한다.</p> <p>⑤ 제2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자신이 지원하는 학술대회의 주제, 진행방식, 참가자 및 관련 자료의 결정 등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경비의 회계처리 시 지원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의 지원에 있어 부스 임대나 광고를 통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지원에 대해 사업자별 지원금액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제8조(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와 제7조(기부행위) 또는 제17조(전시·광고)가 경합하는 경우 제8조가 우선하여 적용된다.</p>	<p>⑤ 규약 제8조 제3항의 자기부담에 포함되는 수입 항목은 학술대회와 관련한 등록비(또는 참가비) 및 단체 및 학회 자체 예산 중 사업자나 치과기재 등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이 아닌 것(예: 회원의 회비)으로 해당 학술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p> <p>⑥ 규약 제8조 제4항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학술대회 개최일 최소30일 전에 첨부양식(별표 7)에 따른 신고서 및 해당 학술대회가 국제학술대회임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으로부터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의 명단을 제출받아 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학술대회를 사업자가 지원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본 항의 국제학술대회임을 증명하는 증빙자료의 첨부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⑦ 규약 제8조 제5항은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p>제9조 (학술대회 참가지원)</p> <p>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관·단체가 주관하여 개최하는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인을 해당 학술대회의 주최자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1. 치의학 관련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p>	<p>제6조 (학술대회 참가지원)</p> <p>① 규약 제9조 제2항 제2호의 발표자(포스터 발표자 포함, e-포스터 발표자 불포함), 좌장, 토론자는 학술대회 주최자측에서 선정한 보건의료인을 말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실비정산으로 한다.</p> <p>② 협회는 제1항의 보건의료인이 학술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사업자외의 자</p>

<p>2.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회,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및 이들 협회 또는 단체가 승인·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단체나 연구기관·단체</p> <p>3.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p> <p>4. 협회가 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단체나 연구기관·단체</p> <p>② 지원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p> <p>1. 제1항의 국내외 학술대회는 학술적·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적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로 한정한다.</p> <p>2.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원 내용은 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지원받는 실비의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에 한한다.</p> <p>3. 사업자는 지원하려는 학술대회만을 지정하여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보건의료인을 지원하여야 하며, 협회를 통해 지원하는 것 외에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기관·단체나 그 관계자,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p> <p>4. 학술대회 참가지원이 여행·관광·여가활동 지원 등 향응이나 접대와 결부되어서는 아니 되고, 보건의료인의 동반자에 대한 지원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p> <p>5. 사업자는 학술대회 참가지원 경비의 회계처리 시 관련 학술대회의 주최자, 내용, 대상, 지원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학술대회 참가지원과 관련하여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로부터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받는 경우, 본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지원이 행해짐으로써 중복지원이 행하여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규약 제9조 제2항 제3호와 관련하여, 학술대회 주최자는 지원받고자 하는 학술대회를 개최 90일전에 협회에 첨부양식(별표 9)에 따라 요청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학술대회 개최 60일전까지 협회에 첨부양식(별표 8)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학술대회 주최자 측을 통해 참가자를 지원한다.</p> <p>④ 협회는 학술대회 종료 후 학술대회 주최자측로부터 규약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의 실비의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에 대한 증빙자료와 함께 실비 정산내역서를 받아 검토하여 이를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지원금을 협회로 납부하도록 하여 학술대회 주최자 측에게 전달한다.</p> <p>⑤ 규약 제9조 제2항 제2호의 실비의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금액기준은 'VAT 별도'을 원칙으로 한다(이 기준에서 동일 적용).</p> <p>1. 교통비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이코노미클래스 국제항공 왕복운임으로 귀국일자 확정 요금을 적용한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교통비는 정산시 여정이 적힌 내역서, 영수증, 보딩패스로 증빙되는 목적지까지의 이코노미 클래스 국내항공료, KTX 일반석, 우등 고속버스 또는 이에 준하는 대중교통수단 운임으로 한다.</p> <p>2. 등록비는 사전등록이 원칙이며, 비용으로 송금한 날짜 기준 환율을 적용한 한화 금액 또는 신용카드 청구영수증의 금액을 적용한다.</p>
---	--

<p>1. 사업자를 대신하여 사업자가 지정한 학술대회의 주최자에게 지원금을 제공한다. 단, 협회는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목적과 용도만을 지정할 수 있을 뿐,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을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p> <p>2. 학술대회가 완료된 이후 학술대회 주최 측 또는 참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필요한 증빙자료를 받아 학술대회의 주체, 내용, 지원금액, 지원금액의 사용내역 등을 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p> <p>3. 경비 지급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성실히 관리하고, 지원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라도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p>3. 식대는 학술대회 숙박기간 동안에 1일 3식 지원으로 식사시간대에 현지 식당에서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한 영수증을 1식 1장 최대 10만원, 1일 총 15만원이내로 지원한다. 단, 현금결제 시 사유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p> <p>4. 숙박비는 국내의 경우 1박당 20만원, 해외의 경우 1박당 35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필요시 학술대회 개최 1일전 숙박부터 학술대회 종료일까지의 숙박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숙박비에 미니바, 영화, 세탁, 전화 등 숙박에 부수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p> <p>5.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현지 교통비는 공항-호텔간 왕복 교통비 및 학술대회 참석을 위한 숙소-행사장간의 교통비(1일 왕복 1회 한정)로 학술대회 기간 내 1인 최대 15만원까지로서, 이용시간 및 출발지 및 도착지가 명기된 영수증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한 한다.</p> <p>6. 정산시 적용환율은 학술대회 시작 전일(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외환은행 현금매입 최고고시가 환율을 적용한다.</p> <p>⑥ 규약 제9조 제3항 제2호와 관련하여 협회는 1,4,7,10월에 전 분기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내역(학술대회명, 학술대회 주최자, 지원사업자명, 지원총액, 지원대상자 수, 지원대상자 소속 의료기관명 등)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p> <p>⑦ 사업자는 참가지원 업무처리에 대한 수수료로 본 기준 제4조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p>

제10조 (자사제품 설명회)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근거하여 자신이 개최하는 복수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설명회에 참가한 보건의료인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실비 상당의 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는 학술대회의 일부로 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다.

1. 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의 제공대상은 제품설명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인에 한하고, 보건의료인의 동반자에 대한 제공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2. 사업자는 제품설명회 개최 시 행사장소, 행사내용 및 개최방법 등이 불공정행위로 오해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제품설명회 개최에 앞서 제품설명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인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해당 제품설명회 개최 30일 전에 협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구체적인 제품설명회계획서, 소요예산안 등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해당 제품설명회 개최 승인을 신청하여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제품설명회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제품설명회의 비용결산 내역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협회는 사업자가 제품설명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 이외의 제1항의 제품설명회의 경우에는 제품설명회 개최 30일전에 협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품설명회 경비의 회계처리 시 관련 제품설명회의 일시·장소·내용, 참석자 명단, 지출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개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자사의 치과기재를 설명하는 제품설명회의 경우에는 사업자는 보건의료인에게 식음료 및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기입된 소액의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보건의료인 모임 등에서 필요한 식음료를 지원하기 위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자사제품 설명회)

① 규약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자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보건의료인에게 실비상당의 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할 수 있다.

1. 숙박은 1박 20만원 이내로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교통비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제품설명회 개최 목적지까지의 왕복운임을 적용하며, 정산 시 여정이 적힌 내역서, 영수증, 보딩패스로 증빙되는 목적지까지의 이코노미 클래스 국내항공료, KTX 일반석, 우등 고속버스 또는 이에 준하는 대중교통수단 운임으로 한다.

3. 식음료는 필요한 경우 1일 3식까지, 1식 최대 10만원 (영수증 1장), 1일 총 15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4. 기념품은 5만원 이내의 물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규약 제10조 제2항 전단의 제품설명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인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것이 예정된 경우, 사업자는 제품설명회 개최일 30일전까지 첨부양식(별표10)에 따라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개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설명회 종료 후에는 1개월 이내에 해당 제품설명회의 비용결산내역을 첨부양식(별표11)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제품설명회 개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협회에 심의비 20만원(VAT별도)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심의된 개최계획의 단순 변경(개최일, 장소변경 등)신고는 변경신고와 심의비가 면제된다.

	<p>④ 규약 제10조 제2항 후단 제품설명회의 경우, 사업자는 첨부양식(별표12)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개최일 30일 전까지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⑥ 규약 제10조 제4항의 경우 사업자는 각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1일 10만원 이내의 식음료(월 최대 4회) 및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기입된 1만원 이하의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식음료는 동일 보건의료인에게 제10조의 교육 또는 훈련의 경우를 포함하여 월 4회를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다.</p>
<p>제11조 (교육·훈련)</p> <p>① 사업자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의료기관 소속 보건의료인, 시술 및 진단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사의 의료기기와 관련한 시술 및 진단기술의 습득·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복수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자사의 의료기기의 기술습득·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국외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의료기관 소속 보건의료인, 시술 및 진단 관련 종사자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실비 상당의 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교육·훈련은 학술대회의 일부로 보며 이에 대한 지원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다.</p> <p>1. 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의 제공대상은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인 및 시술·진단 관련 종사자 한하고, 보건의료인 및 시술·진단관련 종사자의 동반자에 대한 제공은 허용되지 아니한다.</p> <p>2. 사업자는 교육·훈련 개최 시 행사장소, 행사내용 및 개최방법 등이 불공정행위로 오해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p>	<p>제8조 (교육 또는 훈련)</p> <p>① 규약 제11조에 제2항에 따라 사업자는 교육 또는 훈련에 참석한 보건의료인에게 실비상당의 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할 수 있다.</p> <p>1. 숙박은 국내는 20만원 이내, 국외는 35만원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p> <p>2. 교통비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교육·훈련 개최 목적지까지의 왕복운임을 적용하며, 정산 시 여정이 적힌 내역서, 영수증, 보딩패스로 증빙되는 목적지까지의 이코노미 클래스 국내항공료, KTX 일반석, 우등 고속버스 또는 이에 준하는 대중교통수단 운임으로 한다.</p> <p>3. 식음료는 필요한 경우 1일 3식까지, 1식 최대 10만원 (영수증 1장), 1일 총 15만원이내로 지원한다.</p> <p>4. 기념품은 5만원 이내의 물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p>

③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수입품목허가(신고)를 받은 후 국내에 수입된 바 있는 의료기기에 관한 교육·훈련을 국외에서 실시할 경우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인, 기술 및 진단관련 종사자에게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 개최 시 행사장소, 행사내용 및 개최방법 등이 불공정행위로 오해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교육·훈련 개최 전 국내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인 및 기술·진단 관련 종사자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것이 예정된 경우와 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 개최 30일 전에 협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훈련 개최계획서, 소요예산안 등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해당 교육·훈련 개최승인을 신청하여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교육·훈련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훈련의 비용결산 내역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협회는 사업자가 교육·훈련을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 이외에 국내에서 복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숙박을 제공하지 않고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개최 30일 전에 협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가 개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의료기관 소속 보건의료인 및 기술·진단 관련 종사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자는 참석자에게 식음료 및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기입된 소액의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식음료는 동일 보건의료인 및 기술·진단 관련 종사자에게 제10조 제4항의 제품설명회의 경우를 포함하여 월 4회를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다.

⑥ 사업자는 국내·외 교육·훈련 경비의 회계처리 시 관련 교육·훈련의 일시·장소·내용, 참석자명단, 지출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보건의료인 및 기술·진단 관련 종사자 모임 등에서 필요한 식음료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개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규약 제11조에 제2항에 따른 수입업자의 국외 교육 또는 훈련은 당해 치과기재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변경허가 등 사용방법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반복될 수 없다.

③ 규약 제11조 제2항의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자사의 의료기기” 는 수입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이후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④ 규약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수입되어 교육 또는 훈련이 가능한 치과기재 등은 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수입되어 국내의료기관등에 진료 또는 연구 목적으로 설치되어 교육 또는 훈련의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⑤ 규약 제11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자는 보건의료인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개최하는 경우 개최 30일 전에 첨부양식(별표10)에 따라 협회에 사전심의신청서를 제출한다. 해당 교육·훈련 종료 후에는 30일 이내에 해당 교육·훈련의 비용 결산내역을 첨부양식(별표11)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개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협회에 심의비 20만원(VAT별도)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심의된 개최계획의 단순 변경(개최일, 장소변경 등)신고는 변경신고와 심의비가 면제된다.

⑦ 사업자가 국내의 복수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숙박을 제공하지 않고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첨부양식(별표12)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개최 30일 전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⑧ 규약 제11조 제5항의 경우 사업자는 각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1일 10만원 이내의 식음료(월 최대 4회) 및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기입된 1

	<p>만원 이하의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식음료는 동일 보건의료인에게 규약 제10조의 제품설명회 경우를 포함하여 월 4회를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다.</p>
<p>제12조 (강연·자문)</p> <p>① 사업자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판촉목적으로 강연 또는 자문을 의뢰하고 강연료 또는 자문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보건의료인의 치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여 강연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의료인에 대한 강연 또는 자문의 요청은 제10조에 의한 제품설명회 및 제11조에 의한 교육·훈련의 경우와 회원사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치의학적, 전문적 정보습득의 목적에서 그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2. 강연료 또는 자문료는 보건의료인의 지식, 경험 수준 및 사회통념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행한 강의활동 또는 자문활동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강연 또는 자문의 완료 이전에 강연료 또는 자문료 전액을 미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자는 강연료 또는 자문료의 회계처리 시 해당 강연자 선정 및 자문위원 위촉사유, 강연 및 자문일시, 강연 및 자문내용, 강연 및 자문내용의 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p>② 사업자는 강연료 또는 자문료 지급이 완료된 후 강연 또는 자문일시, 강연료 또는 자문료 지급내역 등을 협회에서 정한 신고양식에 따라 지급일 기준 20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p>	<p>제9조 (강연 및 자문)</p> <p>① 규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보건의료인에 지급하는 강연료는 보건의료인당 1일 100만원 및 1월 200만원의 범위내에서 1시간까지의 강연 1회당 50만원이내의 금액을 지급한다.</p> <p>②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강연 또는 자문을 특정 보건의료인에게 반복적으로 의뢰하거나 과도하게 다수의 보건의료인에게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사업자가 보건의료인에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사업자는 사전에 해당 보건의료인이 수행할 자문업무의 내용과 자문료를 명시한 서면계약을 당해 보건의료인과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자문료는 보건의료인 1인당 1회 50만원 및 연간 300만원이내에서 지급해야 한다. 단,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수행하는 자문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규약 제14조 (시장조사) 및 운용기준 제10조 제1항의 기준을 따른다.</p> <p>④ 강연은 10인 이상의 청중이 참석해야 하며, 강연자는 최소 40분 이상 의학적, 전문적 정보전달을 해야 한다. 단 규약 제11조에 의한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기술전수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청중 수에 제한이 없다.</p> <p>⑤ 규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는 보건의료인에게 강연료 또는 자문료를 지급한 경우,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고양식(별표15)에 따라 지급일 기준 20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3조 (임상시험용 치과기재의 제공 및 대여)</p> <p>사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상시험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량의 임상시험용 치과기재 등을 보건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무료로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설치된 관련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임상시험(동물시험, 실험실 시험 등)이 포함된다.</p>	
<p>제14조 (시장조사)</p> <p>① 사업자는 시장조사에 대한 사례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금품류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사업자는 시장조사의 실시 내역을 협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매분기별로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자는 주로 시장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시장조사를 하여야 하고, 시장조사를 보건의료인에 대한 판촉활동 또는 보상의 수단으로 활용·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사업자는 시장조사가 양질의 치과기재 사용을 도모하고 환자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사업자는 시장조사의 섭외초기부터 그것이 시장조사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p>	<p>제10조 (시장조사)</p> <p>① 사업자가 시장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시장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조사기관은 참여 보건의료인에게 시장조사의뢰 사업자를, 사업자에게 참여 보건의료인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2. 시장조사에 응하는 보건의료인의 선정은 시장조사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3. 시장조사에 참여한 보건의료인에게 10만원 이내의 식음료 또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4. 응답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시장조사의 경우에 한하여 보건의료인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적정수준의 답례비를 제공할 수 있다. <p>② 규약 제14조 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사업자는 지급일 기준으로 분기별 내역을 1,4,7,10월에 해당 월 15일까지 첨부양식(별표13)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5조 (시판후조사)</p> <p>① 사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시판후조사 계획과 실시 기준에 따라 시판후조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p> <p>1. 시판후조사는 의료기기법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치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에 비추어 적절한 증례수로 실시하여야 한다.</p> <p>2. 조사대상 치과기재를 채택·구입하고 있지 않은 의료기관에 시판후조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p> <p>3. 조사대상 치과기재의 채택·구입의 지속 또는 구입량의 증가를 조건으로 시판후조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p> <p>4. 시판후조사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수는 조사 목적에 비추어 필요한 사항의 조사가 완전하게 수행되어 사업자에게 그 결과가 보고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한다.</p> <p>5. 제4호의 보고를 받기 전에 보건의료인에게 보수 전액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수를 줄 수 있는 증례보고서의 개수는 「의료기기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례보고서의 최소 개수로 하며, 그 보수는 사회통념상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p> <p>② 사업자는 시판후조사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어떠한 경제상 이익도 제공할 수 없다.</p>	<p>제11조 (시판후조사)</p> <p>① 규약 제15조에 의거하여 사업자는 시판후조사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건 의료인에게 증례보고서당 5만원 이내로 보상할 수 있다. 단, 의료기기법령 및 식약청의 관련 규정에 근거한 희귀질환, 장기적인 추적 조사 또는 빈번한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와 같은 추가적인 조사업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만원 이내의 적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규약 제15조 제1항 제5호와 관련하여 사업자는 보건의료인에게 시판후조사에 따른 보수를 용역계약서(비용 산정내역서 포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p>
<p>제16조(시판후조사 외의 임상활동)</p> <p>① 사업자는 치과기재의 임상적 특성, 질병, 또는 그 외 상당한 관심이 있는 보건의료 영역에 대하여 치의학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확보하려는 목적 하에 의료기기 법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임상활동을 계획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p>	<p>제12조 (시판후조사 외의 임상활동)</p> <p>규약 제16조와 관련하여 사업자는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임상활동 및 치의·약학적 연구에 따른 용역비용을 보건의료인이 소속한 의료기관등에 지급하여야 하며 용역이 완료되어 결과보고서를 받기 전에 계약 비용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p>

<p>1. 「의료기기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만, 비임상시험(동물시험, 실험실시험 등)의 경우 해당의료기관에 설치된 관련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임상활동이 포함 된다.</p> <p>2. 임상활동이 단순히 치과기재를 홍보하거나 보건의료인의 치과기재 채택·선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p> <p>3. 사업자는 임상활동의 연구계약에 의해 보건의료인의 노력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 해당 보건의료인이 소속된 의료기관등에 적절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p> <p>4. 사업자는 연구계약을 맺은 의료기관등으로부터 해당 연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확보하여 관련 비용의 회계 처리 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자는 환자가 중재적 임상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실비 상당의 비용을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할 수 있다.</p>	
<p>제17조(전시·광고)</p> <p>① 사업자는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치과기재와 관련 각종 지식과 경험을 널리 알림으로써 치의학적 지식을 확대·보급하고 환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시 또는 광고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전시 또는 광고의 실시 내역을 협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매분기별로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전시 중인 제품 정보들은 반드시 전시대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p> <p>③ 사업자가 의료기관등이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의료기관등이 발행하는 광고매체 등에 자사 및 자사 치과기재를 전시·홍보·광고하려는 목적으로 전시대나 부스를 설치하거나 광고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지급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여야 한다.</p>	<p>제13조 (전시 및 광고)</p> <p>① 규약 제17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는 의료기관등에 광고비 또는 부스비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p> <p>1. 사업자가 의료기관등에 광고비를 지급할 수 있는 광고매체는 (i) 의료기관등이 질병의 치료, 예방, 교육을 위해 작성하여 다수 의료기관 또는 다수 보건의료인에게 배포, 전시하는 인쇄물, (ii) 학술목적으로 설립된 치의학 관련 단체(이하 ‘학회 등’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iii) 학회등이 보건의료인 및/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교육 자료에 한한다.</p> <p>2. 보건의료인이 독자적으로 제작한 광고매체 또는 의료기관등이 제작한 광</p>

④ 사업자는 보건의료인에게 자신의 전시관을 찾아주는 것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소액의 기념품 또는 판촉물은 제공할 수 있다.

고매체(기관지, 연구 잡지 등)로서 배포 대상이 광고매체를 제작한 의료기관에 소속된 보건의료인 및 당해 의료기관 종사자.이용객에 한하는 경우는 사업자가 의료기관등에 광고비를 지급할 수 있는 광고매체라고 보지 않는다.

3. 사업자는 학회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광고의 경우 연 1,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월 100만원까지 광고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 외의 인쇄 광고매체의 경우에는 발행주체, 발행부수, 광고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표의 금액 한도 내에서 적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위 : 만원)

발행기관	표2	표3	표1.4	내지
의료기관	100	70	150	60
학회 등	150	100	200	70

4. 사업자는 학술대회(규약 제8조에 따라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 신청을 한 학술대회 제외)당 1부스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3부스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5. 부스비는 학회 또는 치의학 관련 학술기관.단체나 연구기관.단체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경우 학술대회당 1부스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학술대회의 성격, 규모, 참가인원 등에 따라 아래 각호와 같이 1부스 사용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경우, 학술대회당 1부스 5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학술대회의 성격, 규모, 참가인원 등에 따라 1부스 사용료로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가. 보건의료단체는 최고 250만원까지

나. 보건의료단체 시도지부회는 최고 200만원까지

다. 학회 또는 치의학 관련 학술기관, 단체나 연구기관, 단체는 최고150만원

	<p>까지</p> <p>라. 참가인원이 2,000명 이상인 경우 최고 250만원까지</p> <p>마. 참가인원이 2,000명 이하인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p> <p>6. 부스의 기준 면적은 평면적 3×3m로 하되, 호텔 등 장소가 협소하여 부스설치가 어려운 경우 테이블 크기는 최소 가로 1.5m로 한다.</p> <p>7. 보건의료인, 보건의료인이 구성원인 학회 또는 치의학 관련 학술기관.단체나 연구기관.단체, 의료기관등이 주최하는 학술대회가 아닌 치과기재사업자, 치과기재사업자의 단체(관련 협회 포함)가 주관하는 전시회에는 부스 제한이 없다.</p> <p>② 사업자는 규약 제17조 제1항의 단서와 관련하여 첨부양식(별표14)에 따라 1,4,7,10월에 해당월 15일까지 지급일을 기준으로 각 분기별 지급내역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규약 제17조 제4항의 후단에 따른 “소액의 기념품 또는 판촉물”이라 함은 1만원 이내의 기념품 또는 판촉물을 의미한다.</p>
<p>제3장 규약의 운용</p> <p>제18조(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p> <p>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1. 규약에 대한 상담, 지도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p> <p>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p>	<p>제14조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용)</p> <p>① 규약 제18조의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규약 동조 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을 포함하여 협회장이 위촉한다.</p> <p>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p>

<p>가. 제7조 제2항에 의한 기부대상의 선정,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의료기관등이 기부요청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및 기부대상사업자의 선정,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기부행위의 적정성 여부</p> <p>나. 제8조 제2항에 의한 국내학술대회계획의 적정성 여부 및 학술대회 지원 희망사업자의 지원 가부,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학술대회 지원조건 준수 여부, 같은 조 제4항에 의한 학술대회 지원의 적정성 여부</p> <p>다. 제10조 제2항에 의한 제품설명회 및 제11조에 의한 교육·훈련 개최승인 및 실시의 적정성 여부</p> <p>3. 규약 위반 및 위반소지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p> <p>4. 세부 운용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p> <p>5. 기타 규약과 관련하여 협회가 요청한 사항</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5인이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간사는 협회 상근자중 협회장이 위촉한다.</p> <p>1.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2인(법률전문가 1인을 포함한다)</p> <p>2.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추천하는 2인</p> <p>3. 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추천하는 1인</p> <p>③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위원회는 불공정행위 감시 및 조사, 조치를 위해 치과기재유통불공정신고센터, 실무팀 등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p> <p>⑥ 위원회의 운영, 조사, 조치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용기준에서 정한다.</p>	<p>③ 규약 제18조 제2항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주재한다.</p> <p>④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위원회 외 추가적인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정기개회를 연기할 수 있다.</p> <p>1.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p> <p>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p> <p>3. 협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p> <p>4. 협회장의 개최 또는 연기 요구가 있을 때</p>
--	---

<p>제19조 (위반에 대한 조사)</p> <p>① 위원회는 본 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협회에 신고된 내용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자는 제1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p>	<p>제17조 (조사절차)</p> <p>① 규약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1항에 따라 협회는 공정경쟁규약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협회는 규약위반이 확인되거나 신고가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반 내용 또는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해 해당 사업자(이하 '피신고사'라 한다)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p> <p>② 피신고사는 사실관계확인서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서 또는 시정조치계획서등의 답변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협회는 답변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무팀에 안건상정하고, 실무팀은 확인서를 검토한 후 추가 조사하거나 검토의견을 위원회에 상정한다.</p> <p>④ 위원회 또는 실무팀은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 피신고사의 임직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⑤ 위원회는 비회원사가 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신고 또는 적발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할 수 있다.</p>
<p>제20조 (규약 위반에 대한 조치)</p> <p>① 위원회는 본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 그 위반행위와 같거나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 기타 이들에 관련된 사항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p>	<p>제18조 (조치)</p> <p>① 규약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경고는 규약 위반의 내용이 단발적이고 경미하거나, 아직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향후 발생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조사 기간 중에 해당 행위를 중지하고 재발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 등에 조치한다.</p>

<p>1. 경고</p> <p>2. 경징계: 규약 위반이 명확하고 이로 인해 치과기재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p> <p>3. 중징계: 명백하고 중대한 규약위반행위, 또는 위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p> <p>② 위원회는 경징계로 1,000만원 이하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중징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p> <p>1. 1억원 이하의 위약금</p> <p>2. 관계당국 고발</p> <p>3. 회원 제명 요청</p> <p>④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p>	<p>② 규약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경징계는 규약위반 행위가 조직적·의도적이거나 반복적·계속적이지만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한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 또는 경고를 받고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 등에 조치한다.</p> <p>③ 규약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중징계는 규약위반 행위가 조직적·의도적이거나 반복적·계속적이며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위법행위로 법적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또는 경징계 조치를 받고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 등에 조치한다.</p>
<p>제21조 (사업자의 협조의무)</p> <p>사업자는 이 규약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제22조 (협회의 기록관리)</p> <p>①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1.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사업자의 신고·제출·통보자료, 협회의 관리자료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자료</p> <p>2. 제19조 및 제20조에 근거한 위원회의 조사 및 조치내용</p> <p>②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보건복지부의 제1항의 자료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p>	<p>제20조 (협회의 기록관리)</p> <p>① 협회는 본 운용기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약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자료를 협회 임직원, 위원, 실무위원 또는 당해 사업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p> <p>② 규약 제22조의 자료의 관리 및 제출은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다.</p>

<p>제23조 (이의신청 등)</p> <p>① 위원회는 제19조 제3항 및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해야 할 조치내용(이하 “결정사항”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당해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 사업자는 결정사항을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추가 주장 및 입증기회를 부여하고 동 자료에 근거하여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결정을 하여야 한다.</p> <p>④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의 제기가 없을 때에는 신속하게 결정사항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4장 보칙</p> <p>제24조 (규약의 개정)</p> <p>이 규약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p>	
	<p>제15조 (실무팀)</p> <p>① 규약 제18조 제4항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규약 제18조 제1항의 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하여 실무팀을 운영할 수 있다.</p> <p>② 실무팀은 협회 회원사 임직원 중에서 10명 내외로 협회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p> <p>③ 실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실무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p> <p>④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실무팀의 회무를 주재한다.</p>

	<p>⑤ 실무팀은 다음의 경우에 개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협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협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p>⑥ 실무팀은 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성한다.</p>
	<p>제16조 (의결 등)</p> <p>① 규약 제18조 제3항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서면으로도 심의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일 1주일 전에 위원이 본 항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발송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p> <p>② 위원회 또는 실무팀에 소속한 회원사와 관계된 안건을 다룰 경우, 그 위원 또는 실무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한 심의 및 의결,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위원회의 재적수는 본 항에 따라 관련 위원수를 제외한 전체 위원수로 한다.</p> <p>③ 위원은 타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없다.</p> <p>④ 위원회 및 실무팀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 또는 실무팀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위원회의 결정 없이 외부로 발설해서는 아니 된다.</p> <p>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9조 (면책)</p> <p>사업자는 본 규약 및 운용기준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원, 실무위원, 협회, 협회 임직원에 대하여 법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p>
	<p>제21조 (결정사항)</p> <p>① 규약 제2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관련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내용(이하 “결정사항”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사항을 통지받은 사업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거나 조치내용의 수락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위약금을 부과 받은 사업자는 결정사항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가 결정사항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 심의하여 최종 결정사항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약금을 납부한다.(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의 규정에 따른다)</p>
	<p>제22조 (금액의 산정)</p> <p>① 본 운용기준에서 물품금액의 산정은 당해 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공정시장가격 상당액으로 하고, 시장가격이 없는 물품은 사업자가 당해 물품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제조원가 및 매입가격의 25%인상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본 운용기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p>

	<p>제23조 (비밀유지의무)</p> <p>규약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실무팀, 협회 임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규약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부 칙</p> <p>① [시행일] 이 규약의 시행일은 2012년 8월 1일로 한다.</p>	<p>부 칙</p> <p>① [시행일] 이 세부운용기준은 2012년 8월 6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p> <p>② 협회 회원에 대하여 동 규약과 세부운용기준 외에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과 세부운용기준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규약과 세부운용기준이 우선하여 적용된다.</p>